시 론

다선(多選) 국회의원의 부재, 지역발전에 손해다

이 정 록
전남대 지리학과 명예교수

우리 지역에서 현역 국회의원 대부분이 추풍낙엽 신세가 됐다. '비명횡사 친명횡재' 때문일까. 아니면 지역주민이 변심해서 그랬을까. 제각각 이유가 있을 테다. 하지만 다선 국회의원의 부재는 지역발전에 손해다.

광주 동남을 이병훈 의원 경선 탈락은 아쉽다. 이 의원은 자타가 인정하는 문화정책 전문가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과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경력이 증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련 특별법 개정 작업을 주도해 기관의 위상을 높였다. 상임위 활동에서는 K-콘텐츠산업 지원 확대를 이끌었다.

광주 북구을 이형석 의원도 마찬가지다. 이 의원은 광주가 키운 반듯한 정치인이다. 조선대를 졸업하고 광주은행에 입사해 노조위원장을 지냈다. 1998년 광주시의원을 시작으로 광주시 경제부시장을 지냈다. 광주의 30년 숙원이던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착공은 그의 작품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라는 지위를 갖는다. 때문에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지역구민만을 위한 입법과 정책활동을 펼치면 비난받는 이유다. 하지만 자신의 지역구에서 행해지는 특정 사업이 해당 지역은 물론이고 국가 전체 발전에 이바지하는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프랑스 소피아앙티폴리스는 국회의원이 지역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웅변한다. 남부 지중해와 인접한 이곳은 1970년대 초까지 작은 관광지에 불과했다. 이곳 출신이자, 국립광업대 교수였던 피에르 라피트는 1960년 소피아앙티폴리스를 사이언스 파크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개인적 구상은 1969년 자치법령으로 확정됐다. 이후 소피아앙티폴리스는 유럽 최고 실리콘밸리가 됐다. 이 과정에 피에르 라피트는 정치적 후견인 역할을 톡톡히 했다. 1985년 알프 마리팀(Alpes-Maritimes) 상원의원에 당선돼 2008년까지 상원의원으로 활약했다. 소피아앙티폴리스 성공에는 상원의원 피에르 라피트가 있었다.

우리 지역에서는 정반대 경우가 있다. 제13대(1988년) 광양군 국회의원 선거다. 4명 후보가 출마했다. 최대 관심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 후보(김종호)가 DJ의 평화민주당 후보(이돈만)를 제치느냐 여부였다. 김종호 후보는 모두가 인정하는 광양의 인물이었다. 육사를 졸업했고 소장으로 예편했다. 전남도지사(1980년 5월-1982년 1월)와 건설부장관(1982년 1월-1983년 10월)도 지냈다. 전남도지사 시절 제2제철소(현 광양제철소) 광양 유치에 결정적 공헌을 했다. 당시 포항제철 박태준 회장을 설득해 후보지를 아산만에서 광양만으로 돌린 장본인이기도 했다. 하지만 광양군민은 미국에서 활동한 민주화 운동 외에 특별한 경력이 없는 40세 후보를 택했다. 광양을 천지개벽시킨 주역을 외면했다.

1970년대 초반 일본 총리를 지낸 다나카 가쿠에이는 설국으로 유명한 니가타현 출신이다. 정계 입문 후 빈약한 고향 처지를 대변해 균형발전을 줄기차게 주창했다. 일본의 지방이 우리나라 지방보다 잘사는 이유도 그가 1971년 주창한 '일본열도 개조론' 덕분이다. 2010년대 아베 신조 총리의 '지방 창생'도 다나카 총리의 균형발전 정책에 근거한다. 북동쪽의 변방 도시 니가타와 도쿄를 연결한 조에쓰 신칸센은 다나카가 고향에 준 선물이었다.

다선 국회의원 배출은 해당 지역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다. 다선이 돼야 국회 상임위장은 물론이고 당 대표와 대권 도전의 길이 열린다. 1988년 소선거구제 실시 이후, 광주에서 4선은 박주선이 유일하다. 전남에서 4선은 김성곤, 박지원, 주승용, 한화갑 등이며, 5선은 김충조, 박상천, 이낙연 등이다.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정치인은 박주선(국민의당)과 이낙연(더불어민주당)뿐이다. 다선 국회의원 배출이 지역의 정치적 자산이란 측면에서 우리 지역 성적표는 초라하다.

일부 정치평론가는 광주와 전남 주민의 정치적 아이큐가 뛰어나다고 말한다. 이른바 정치력(政治力)이 높다면 지역에 뿌리를 내린 잠재력 있는 국회의원을 대권 후보에 버금가는 정치적 지도자로 키우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싹수 있고 경쟁력 있는 유망한 국회의원을 물갈이하기 때문이다. 현역 교체 광풍 속에 살아남은 이개호(영광 등), 서삼석(무안 등), 신정훈(나주 등) 등이 그래서 지역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됐다.

광주와 전남에 지역구를 둔 다선 국회의원의 부재는 지역발전에 손해다. 지역민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기 고

반도체 팹 무안반도 유치, 지금이 기회다

김 귀 선
목포시의회 부의장

지금 같이 RE100이 주목받던 때가 있었던가 싶다. 얼마 전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슈퍼을'로 통하는 네덜란드 ASML이 "2040년까지 고객 업체들을 포함한 모든 생산·유통 과정에서 '넷제로(탄소배출량 0)'를 달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ASML의 장비를 납품받는 모든 반도체 제조업체는 넷제로를 달성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렵게 된 것이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ASML이 제시하는 재생에너지 범주에 원자력발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10%남짓인 국내업체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지난 1월15일, 정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용인·화성·평택 등 경기 남부 일원에 반도체 생산 팹 13기, 연구 팹 3기 등 팹 16기를 신설해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거창한 계획에 반해 정부 주도의 전력 인프라 구축방안은 너무도 허술하다. 더욱이 RE100에 대응하는 방안은 없다시피 하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초기 전력은 LNG 발전을 통해 공급하고 이후 부족분은 동해안의 원자력발전과 호남의 재생에너지를 송전설비를 신설해 끌어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LNG나 원자력발전은 RE100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 전력으로 만든 반도체는 외국 수출이 어렵다. 또한 이 계획대로라면 송전탑 신설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동해안과 호남 전체는 송전탑으로 뒤덮이게 될 것이다. 얼마나 큰 낭비인가?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다.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반도체 팹을 지으면 된다. 호남은 이미 많은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있다. 특히 무안반도는 신안의 풍력, 무안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으로 여기서 생산된 전기는 호남에서 다 소비하지 못해 남아돌고 있다.

더욱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반도체산업의 입지, 공기가 깨끗하고 소음이나 진동이 없는 곳, 지진의 영향이 없는 대규모 면적의 부지가 있는 곳, 공업용수가 풍부하고 원자재 수입 및 완제품 수출이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는 점도 충족하고 있다.

이밖에 문화·소비시설이 잘 갖춰진 곳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목포는 이미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돼 많은 부문에서 지원받고 있다. 신안은 천혜의 환경으로 고급주거시설과 제주영어교육도시와 같은 교육인프라 구축이 용이하다. 무안반도야말로 반도체 팹이 입주할 최적의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이라 할만하다.

또한 반도체 팹의 지방 신설은 인구감소,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할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은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초저출산의 해결책을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과 경쟁압력을 낮추기 위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구조정책'의 추진" 즉, 지방에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수도권 집중이 해소되고 주택가격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은행 보고서의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반도체 팹의 지방 신설이다.

지난 2022년,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그들의 공약이었던 반도체 특화단지를 추진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당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원전을 탄소배출이 없는 친환경에너지로 RE100보다는 CF100을 추진하며 수도권에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방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번 네덜란드 ASML의 '2040 넷제로 정책'뿐만 아니라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380여 개 글로벌 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며, RE100 달성을 납품업체 등 공급망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무안반도 3개 자치단체, 목포·무안·신안은 인구감소 지방소멸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신안·무안 등 지역주민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재생에너지가 타시도로 송전되지 않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무안반도 3개 자치단체는 반도체 팹 유치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봄철 논밭두렁 태우다 금수강산 다 태운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 난다는 경칩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다. 얼어있던 대지와 들판에 따스한 봄의 기운이 전해지고 부지런한 농부들은 벌써부터 봄갈이 준비를 하느라 바쁘다.

그러나 봄철 논밭두렁의 건초를 태워야 병충해가 없어진다는 편견으로 이맘때 논밭두렁 태우기가 횡행하고 있다.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도 발생하고 있는데 아주 위험하다.

봄철은 대지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해 산불이 나면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다. 산림청은 지난 14일 산불 발생이 늘자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전국에서 매년 평균 536건의 산불이 발생하는데 약 30%가 논밭두렁 소각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영농부산물을 파쇄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직접 농촌 곳곳을 찾아가 분쇄기를 이용해 부산물을 처리하고 있다.

재난 전문가들은 하인리히 법칙을 자주 인용한다.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전, 300번의 사소한 위험과 29번의 중간 위험이 발생, 이후 1번의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법칙이다. 하인리히 법칙은 사소한 소각이 대형산불로 이어진다는 것을 교훈삼게 한다.

소중한 공동체의 파괴로 피해지역 주민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웅산·해남경찰서 경비안보과〉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민주당에 냉랭한 호남…'현역 교체율 60%'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4·10총선에 나설 광주·전남 18개 선거구 후보 공천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현역 의원 물갈이 비율이 60%을 넘는 수준이지만 일부 선관위 고발 및 고소 등 후폭풍도 이어지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친명(親이재명)계와 비명계 사이 계파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범 친명계의 강세도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다. 이 과정에서 '신명(新이재명)계'도 등장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같은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군사정권에 맞서 반독재 투쟁에 앞장섰던 운동권의 몰락 또한 주목되는 부분이다.

민주당은 경선에서 오락가락하는 '고무줄 잣대'로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샀다. 지금까지 여론조사 1위에 오른 후보자에 대해 별다른 설명 없이 컷오프(공천배제)시키거나, 공관위 결정을 재심위에서 뒤집고 인용된 결정을 최고위에서 다시 기각시키는 등 혼란을 부추겼다. 아울러 친명 후보들에 대한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 등 공정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이전과 다르게 다자구도로 본선 대진표가 짜여졌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싹쓸이한 민주당은 호남 패권을 둘러싼 격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진정책을 지속해온 여당인 국민의힘도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구에서 후보를 냈고, 제3지대의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 그리고 녹색정의당에 무소속까지 가장 치열한 선거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텃밭에서 이번에도 전석 석권을 목표로 하지만 장담 못한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옥중 출마) 등 거물급 정치인과 민주당 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경쟁력 있는 무소속도 많다. 국정 안정을 호소하는 국민의힘은 2-3석 확보를 위해 호남 보수의 대표 이정현 후보를 앞세워 표밭을 누비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21-22일)이 임박했다.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주(28일) 막이 오른다. 민주당이 자랑했던 '시스템 공천'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 중심으로 정권 심판론이 탄력을 받을지 판가름난다. 민주당이 우위를 점했던 정치지형의 변화가 나타나느냐가 관심사다. 그런데 지역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 민심이 냉랭하다. 민주당이 받아들 성적표에 전국적인 이목이 쏠린다.

'일조량 부족' 재해 인정은 전남도 적극행정 성과

충분히 이상기후라 할 만 하다. 잦은 비에 흐린 날이 계속되면서 농작물 피해가 심상찮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나주, 담양 등 전남 주요 지역 평균 일조시간은 133시간으로 최근 10년 전국 평균보다 25% 감소했다.

2월에는 비가 15일간 내리며 딸기 등 시설원예 작물에서 생육 지연, 기형과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딸기는 생육과 열매 성숙이 늦어지는 생리장해가 나타나고, 잿빛곰팡이병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멜론은 수정 및 착과, 과실 비대 불량으로 특품 출하량이 급감했다. 농가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또 잠재적으로 물가 인상을 자극하는 요인이어서 소비자 가격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생산량 감소를 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전남도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다른 재해와 달리 육안으로 즉시 확인되지 않아 해당 지자체에서 기상과 농작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재해로 판정된다. 농작물 피해조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4월초까지 농작물 피해 신고·접수를 실시한다.

최근 전 지구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앞으로 일조량 관련 피해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일조량 부족이 농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라고 한다. 또 다양한 형태로 자연재해가 반복될 수 있다. 기존의 재해 인정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특히 전남도의 선제적 적극행정이 돋보였다. 최근 30년 평균 지역별 통계, 타지와 동일 작물 대조군 비교, 품목별 피해 분석을 통해 입증하며 정부에 수차례 건의, 드디어 성과를 거뒀다. 농도(農道)에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 뒷받침한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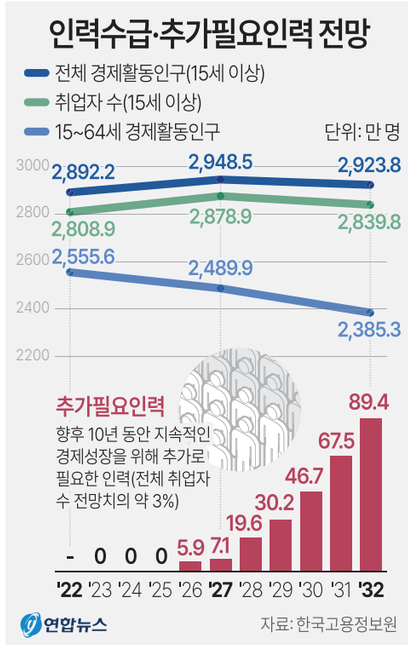
농가에겐 희소식이다. 일조량 부족 피해가 확인되면 복구비 지원 및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겨울철 생산량 감소와 난방기 사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농업재해가 최종 인정돼 경영 안정에 숨통이 트였다.

그래픽 뉴스

취업자 수 2027년이 '정점'…고용률도 2028년부터 꺾일 듯

한국고용정보원은 향후 인구 전망과 산업별 전망 등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2022-2032년)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을 19일 발표했다. 우선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022-2032년 31만6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전 10년간(2012-2022년) 증가 폭 314만 명의 10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2027년 2천948만5천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8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서 2032년엔 2천923만8천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15-64세 경제활동인구로 놓고 보면 더 일찍 감소세가 시작돼 2032년까지 170만3천 명이 순감할 전망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2022년 63.9%에서 2032년 63.1%로 후퇴가 점쳐진다. 노동력 공급 감소 속에 15세 이상 취업자도 2028년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 2천878만9천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32년에는 2천839만9천 명으로 내려간다.



2027년까지 증가할 인원을 고려하면 2022-2032년 30만9천 명이 순증하긴 하지만, 역시 지난 10년간 증가 폭(313만4천 명)의 10분의 1 수준이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2028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22년 62.1%에서 2032년엔 61.3%로 0.8%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고용정보원은 내다봤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 장 馬亨列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CMYK